

“전범기업 면죄부라니...굴욕적 해법 철회하라” 반발

정부 강제동원 해법안 반응 보니

외교부가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가해자인 일본 기업이 아니라 피해자인 한국정부 산하 재단이 한국 기업들에서 돈을 모아 배상한다는 일명 '제3자 변제' 해법을 강행하자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날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를 통해 정부의 해법안을 제시한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도 역사학자들이 강하게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광주전남역사정의 평화행동은 이날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이번 해법은 민주정치 기본 원칙인 삼권 분립을 무시하고 대한민국 사법부 판결을 무력화시킨 '사법 주권의 포기'이자, 자국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한 '제2의 을사늑약이다'라고 철회를 촉구했다.

단체는 "118년 전 을사늑약이 일본의 강압에 의한 외교권 상실이라면 오늘의 발표는 한국 정부 스스로 외교권을 포기한 꼴이다"면서 "일본에 외교적 승리를 가져다 주기 위해 지난 3·1절 기념식에서 일본을 '파트너'라고 지칭한 것 아니냐"고 분노했다.

단체는 이어 "대한민국 사법부 판결에 따른 정당한 배상금을 놔두고, 애만 한국 기업들이 왜 난데없이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대신 떠안아야 하는가"며 "정부의 굴욕적 해법은 일본과 전범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을

광주·전남 시민단체·역사학자들

“일본기업 배상 책임 왜 떠안느냐 피해국이 나서서 용서, 전례 없이 사법주권 포기, 제2의 을사늑약”

한미일 동맹 의식 선부른 판단 속 7일 사죄배상 촉구 긴급 시국선언

난데없이 불우이웃 취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박진 외교부장관이 밝힌 '국민의 아픔을 보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실질적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는 입장에 대해서도 시민모임은 "한일관계 정상화라는 구실 속에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의 완성 위해 일제 피해자들을 제물로 바친 꼴"이라고 비난했다.

외교부가 밝힌 일본경제단체연합회와 한국전경련이 함께 '미래청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10년 전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다가 피해자 쪽으로부터 퇴짜 맞은 장학기금이 윤석열 정권 한 일 간 협상 성과로 다시 등장했다"며 "일제 시민단체의 교섭에서도 퇴짜 맞은 방안이 윤석열 정부의 협상 결과물로 등장하다니, 기가 막힌 일이다"고 한탄했다.

역사학계에서도 이날 외교부의 발표를 두고 정부가 잘못된 일제 강점기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고 비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 해결방안이 발표된 6일 광주시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회원들이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성태 남도역사연구원장은 "역사적으로 가해국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되레 피해국이 나서서 용서를 해버리는 경우는 전례를 찾기 힘들다"면서 "일제 강제징용에 참여했던 이들이 아직 살아 숨쉬고 있는 상황에서 사과와 배상이 전제되지 않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미·일 동맹 관계를 의식해 선부른 판단을 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윤 정부가 미국과 일본 방문, G7 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결렬적인 강제징용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려 했다는 것이다. 최영대 전남대 사학과 명예교수는 "우리 정부가 한·미·일 삼각 동맹에 대한 관계 개선 필요성을 느껴 서두른 것 같다"며 "일본은 역사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은 채 버티고만 있는데 한국이 스스로 삼각 동맹을 위한 선부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진정한 역사적 해결에는 '돈'이 아닌 '사과'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덕일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장은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오늘날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은 빌리 브란트의 공식 사과를 비롯해 오랜 뉘우침의 표현이 있었기 때문이다"면서 "돈 문제는 차치하고 일본의 진정한 사과가 전제되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 발전하겠다'는 정부의 설명에 대해 한홍구 성공회대 열림교양대학 교수도 "사죄 없는 전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

하게 비판했다. 한 교수는 박근혜 정부 당시 위안부 합의를 언급하며 "국가간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당장 속전속결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냥 두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한 교수는 또 "일본이 사과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사과를 구걸해선 안된다"면서 "정부가 선불리 해결책을 제시하면 다시는 없던 일로 돌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부의 해법안에 대해 일제강제동원 피해 당사자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는 시민단체와 함께 7일 오후 1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 일본의 사죄배상을 촉구하는 긴급 시국선언을 발표한다. /김대진 기자 kdi@kwangju.co.kr

대위변제 법적 논란 속 대법 강제집행 재항고심 주목

강제동원 3자 변제 법률적 판단은?

대위변제 수용엔 가해자 채무 소멸 법조계 "피해자 거부 땐 변제 안돼" 정부 이해관계자 포함 여부도 쟁점

외교부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일명 '제3자 변제'로 해결하겠다는 방안을 내나 대법원의 강제집행 재항고심 선고 판결로 이목이 쏠리게 됐다.

피해자들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제3자 변제가 가능한지 여부와 정부가 민사 사건의 이해관계자로 해법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자위에 있는지 여부를 대법원이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3자 변제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해법안이 또 다른 법적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6일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등 원고 5명은 지난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국내 첫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이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미쓰비시중공업이 위자료 주지 않고 버티자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에서 소유 중인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이에 미쓰비시 측이 법원의 압류 결정이 부당하다며 항고를 거듭하다 마지막 선고인 대법원의 재항고심까지 가게 됐다. 지난해 8월 일본 전범기업 자산 현금화 관련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한국 외교부가 대법원에 '선고연기'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해 결국 최종 결정이 미뤄졌다. 문제는 앞으로 있을 대법원 최종선고에서 정부의 제3자 대위변제 안을 받아 들일지가 관건이다. 대법원이 이 안을 받아들이면 가해자의 채무가 소멸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피해 당사자가 제3자에게 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 ▲정부가 해법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가 되는지 여부 등 두가지 쟁점을 문제로 삼고 있다.

먼저 피해자(채권자)가 제3자가 손해배상 하는 것을 거부함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단순 금전적 손해배상이라면 가능하겠지만, 이번 사건은 '불법행위에 의한 위자료 소송'이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사 표현이 있다면 제3자가 대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피해자들에게는 강제 매각을 그대로 진행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게 지배적 시각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인들도 정부의 해법에 동의하는 피해자와 유족들의 경우 채권소멸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해법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은 기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제3자인 정부가 재단을 통해 마련한 돈으로 대신 갚아 줄 수 있는냐는 점이다.

그동안 대법원은 법률상 이해관계인을 손익이 발생하는 법률적 위치 여부로 결정했는데 이번 사안에서 정부도 그런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관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 대다수의 의견이다. 결국 정부는 공탁 등의 방식으로 채권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한일협약의 당사자가 정부인 만큼 이해관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정치적·외교적인 판단이 가미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법원이 이런 전향적인 판단을 내릴지는 의문이라는 설명이다.

양금덕 할머니 법률대리인인 김정희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민법 제469조 제1항)에는 가능하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정부가 재단을 통해 공탁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집행절차에서 공탁의 무효 소송 등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훼손 방치된 양한묵 선생 묘소 긴급 보수

호남 유일 '민족대표 33인'...전남도·화순군·문중 정비

보훈처에 현충시설 지정 요청도

호남 유일 '민족대표 33인' 양한묵 선생의 묘소가 크게 훼손됐는데도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광주일보 3월 2일자 1면)에 전남도와 화순군, 제주 양씨 문중이 긴급 보수 작업을 나섰다. (사진)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제주 양씨 문중은 지난 2일 화순군 화순읍 양한묵리 야산에 있는 양 선생 묘소를 찾아가 훼손된 봉분을 긴급 보수했다. 봉분은 산짐승이 파헤친 듯 흙이 떨어져나가 있었으나 흙을 다시 쌓고 잔디를 심었다. 전남도와 화순군도 2일과 3일 묘소를 찾아 문중의 보수 작업을 지원했다.

보수 과정에서 양 선생의 묘소가 아직 국가보훈처 현충시설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국가보훈처에 현충시설 지정요청서를 제출하고, 기존 70여cm 크기의 비석에 더해 양 선생의 공적을 기릴 수 있는 추가 비석을 설치하는 방안을 문중과 상의할 방침이다.

또 묘소 위치를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마을 어귀 등지에 추가 설치하고 썩거나 부러지는 등 크게 훼손됐던 묘소 진입로 계단도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양 선생 묘 정비를 계기로 이달 중 전남도 내 현충시설 240개소를 일제 정비할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전남도 내 독립운동 관련 121개소, 6·25전쟁 등 국가수호 관련 119개소의 현충시설이 대상이다.

전남도는 이들 시설을 일제히 조사한 뒤 원형 복구와 협업체 개·보수 작업을 할 계획이며, 민간이 관리하는 현충시설의 경우 국가보훈처에 개·보수 지원을 건의한다. 아울러 일제조사 과정에서 양 선생 묘처럼 현충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사적이 발견될 경우 국가보훈처에 문의해 신규 현충시설 지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호국 영령들의 공훈과 희생 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새로운 현충시설을 발굴하고 지정하는 일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h3>경매교육 [특수 전문반]</h3> <p>기초반, 중급반</p>	<h3>전원주택 (1채) → 7,000만</h3> <p>(토지 분양 중) 장성댐 5분, 광주 20분, (6M도로 접)</p>	<h3>상가매매(상무지구)</h3>								
<p>*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2) 중급반 (실전부터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p>① 세컨하우스 ② 소형 주택 ③ 전기,수도,배수 완비 ④ 주말 하우스 최고 ⑤ 잔디,나무,일체 포함</p>	<p>▶ 중심 상업지구 (유형적합) ▶ 유흥가능 (전용 100평) ▶ 시세 - 10억 ▶ 급매 - 7억 (용4억)</p>								
<p>▶ 경매 물건 추천 ◀</p> <table border="1"> <tr> <td>북구 용봉동 (상가빌딩) ▶ 감정가 8억9천 → 최저가 6억2천</td> </tr> <tr> <td>광산구 하남동 (사무나) 3층 ▶ 감정가 62억 → 최저가 35억</td> </tr> <tr> <td>광산구 수완동 (상가 1층) ▶ 감정가 4억 → 최저가 4억</td> </tr> <tr> <td>광산구 수완동 (토지) ▶ 감정가 11억 → 최저가 11억</td> </tr> <tr> <td>북구 신안동 (6층 상가) ▶ 감정가 50억 → 최저가 35억</td> </tr> <tr> <td>북구 오치동 (주택) ▶ 감정가 2억 → 최저가 1억5천</td> </tr> <tr> <td>남구 월산동 (주택) ▶ 감정가 1억7천 → 최저가 7천700만</td> </tr> <tr> <td>장성군 북이면 (잡종지) 1,991평 ▶ 감정가 4억 → 최저가 4억</td> </tr> </table>	북구 용봉동 (상가빌딩) ▶ 감정가 8억9천 → 최저가 6억2천	광산구 하남동 (사무나) 3층 ▶ 감정가 62억 → 최저가 35억	광산구 수완동 (상가 1층) ▶ 감정가 4억 → 최저가 4억	광산구 수완동 (토지) ▶ 감정가 11억 → 최저가 11억	북구 신안동 (6층 상가) ▶ 감정가 50억 → 최저가 35억	북구 오치동 (주택) ▶ 감정가 2억 → 최저가 1억5천	남구 월산동 (주택) ▶ 감정가 1억7천 → 최저가 7천700만	장성군 북이면 (잡종지) 1,991평 ▶ 감정가 4억 → 최저가 4억	<p>★ 토지분양 → 전원주택 토지 (100평, 150평, 200평)</p>	<p>(보3천, 월수익 380만)</p>
북구 용봉동 (상가빌딩) ▶ 감정가 8억9천 → 최저가 6억2천										
광산구 하남동 (사무나) 3층 ▶ 감정가 62억 → 최저가 35억										
광산구 수완동 (상가 1층) ▶ 감정가 4억 → 최저가 4억										
광산구 수완동 (토지) ▶ 감정가 11억 → 최저가 11억										
북구 신안동 (6층 상가) ▶ 감정가 50억 → 최저가 35억										
북구 오치동 (주택) ▶ 감정가 2억 → 최저가 1억5천										
남구 월산동 (주택) ▶ 감정가 1억7천 → 최저가 7천700만										
장성군 북이면 (잡종지) 1,991평 ▶ 감정가 4억 → 최저가 4억										
<p>010-2614-9801</p>	<p>010-6670-9800</p>									